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로지역 재정·경제정책, 공조체제 구축 추진

- 스트라우스-칸 IMF 총재는 유로지역의 정부예산과 관련하여 국가 간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, 국가 간 자금 이동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.

 - IMF는 유로지역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2500억유로(357.9조원)의 구제금융기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유로지역 16개국의 개별 정부예산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 - * IMF가 2500억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경우 재정안정 구제금융기금은 7500억유로(1,073.7조원)로 확대됨.
 - 또한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대한 독일의 경제지원과 같은 개별 지원은 영구적인 것 보다는 기간이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함.

- 유로공동체는 IMF의 제안이후 재정·경제정책에 대해 범유럽지역 차원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힘.

 - GDP 대비 3%를 초과하는 재정적자 국가는 재정안정 구제금융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한다는 의지를 밝힘.
 - 한편, 재정흑자시 흑자를 준비기금으로 적립하는 국가는 ‘준비기금 + GDP대비 3%의 재정적자’ 한도 내에서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.
 - 국가별로는 스웨덴, 폴란드 등이 적극적인 동참을 표명한 반면, 영국은 구제금융기금 마련을 거부함에 따라 범유럽적 공조체제 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됨.

- EU의 재정안정 구제금융기금 마련과 유로중앙은행의 부실국가 국채매입 결정 이후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나, 투자자들은 재정적자 국가의 부채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현재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함.

 - 유로화는 5월 11일 현재 달러대비 €1.2741로 0.4% 절상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황이나 투자자들은 유로중앙은행이 FRB와 영란은행처럼 양적 신용확대를 취해야 유로지역의 위기가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임.

(Financial Times, 5/11, 5/12)